

# 공감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 결과 보고서

## 1. 단체 소개

단체명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관 주요 사업 내용 요약	공익소송 및 인권침해 구제	사회에 파급력 있는 공익소송, 기획소송을 통한 소수자,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구제
	법 제·개정운동 및 제도 개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운동과 연구조사
	공익변호사자립지원 사업	다양한 인권영역과 지역에서 공익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 단체에 상근 변호사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

## 2. 사업 소개

사업명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호사 활동
사업 기간	2025.01.01.~2025.12.31.
주요성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별인권침해사건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뮤지컬배우 근로자성 인정하는 소송 승소,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정규직 전환 거절 소송 승소</li> <li>- (여성) 성매매/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이주여성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li> <li>- (국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2심 승소</li> <li>- (여성) 성차별적 성교육에 문제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제기건 변론 : 형사 불기소 및 민사 승소, 트랜스젠더 등록부정정(성별정정) 사건 지원</li> </ul> </li> <li>● <b>연대를 통한 법 제·개정 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요양보호사 위한 법안 제정 운동</li> <li>- (여성)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별진정 후 1년만에 전면 폐지</li> <li>- (재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법 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활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기업 인권환경실사의무화법안 재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 활동</li> <li>• <b>공익변호사자립지원 사업</b></li> <li>- 지역(목포)기반 이주민 지원 공익변호사, 환경권 활동 공익변호사 신규 지원 개시</li> </ul>
--	-------------------------------------------------------------------------------------------------------------------------------------------------------------------------------------

### 3. 2025 년 사업 보고

활동영역	세부 활동 내역
<p><b>노동</b></p> <p>- 법률 지원 및 소송 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u>뮤지컬배우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승소</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앙상블 배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임금 체불을 경험한 뮤지컬 앙상블 배우들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25. 5. 15. 대법원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가 위법함을 확인받음</li> <li>- 이 판결로 2 명의 원고는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으며, 뮤지컬 앙상블 배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어 앙상블 배우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변화가 생겼음</li> </ul> </li> <li>2. <b>장애인 갱신거절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 소송 승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장애 차별적인 평가 기준을 두어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1 심 판결을 받음</li> <li>-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합리성, 객관성이 담보되는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과 유사 사업장에서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됨</li> </ul> </li> </ol>

**3. 장기요양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장기요양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일부 내용이 발의되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4. 요양보호사 노동권 및 돌봄 공공성 보장 입법 운동**

- 장기요양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임금과 성희롱·괴롭힘·부당지시 경험 문제를 알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였음.

**5.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지원 활동**

-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을 경험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활동지원 수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인건비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책정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정책 형성에 활동지원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당 법안이 발의되어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6. 경기보조원 부당해고재심판정처분 취소 사건**

- 경기보조원(골프장 캐디)은 대표적인 여성 집중 직종 중 하나로, 골프장 직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골프장이 정해진 '7분 간격'에 맞춰 골프장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기 진행, 골프장의 1차적 안전관리자, 당번을 정하여 패인 땅을 메우는 등 골프장의 1차적 유지보수 업무 수행자, 내장객이 골프장에 있는 4-5 시간 동안 고객을 대면하여 응대하는 고객응대업무 수행자 등 다양한 역할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법원 판결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역할만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부정되었고 그 결과로 현장에서 경기보조원의 성희롱, 괴롭힘, 부당해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골프장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 당한 경기보조원을 지원하여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인 받아 경기보조원이 근로

	<p>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당 소송의 1 심, 2 심을 진행하였음. 골프장 캐디의 다양한 업무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업무 등이 과소평가되고 이로 인해 골프장 사고시 캐디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 함</p> <p><b>7.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사회건강연구소, <a href="#">노동건강정책포럼</a>, <a href="#">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a> 등 노동자 건강단체의 자문, 정책 제안 참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산재에서 아버지 원인인 자녀 산재가 배제되는 점 등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가시화하고 2025년부터 4. 28. 이 산재노동자의 날(국가기념일) 지정됨을 홍보, 대통령 선거 전 정책을 제안하고 협약식을 갖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의식 변화 및 법제도적 변화를 촉구하였음</li> <li>- 예술인, 가사노동자, 간병노동자 등 산재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여하여 행정관행의 변화와 법제도적 변화를 촉구하였음. 기후위기로 인한 자원 전환기의 노동문제 토론회에 참여하고 언론에 기고하는 방식으로,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의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예방에 필요한 의식 변화 및 법제도적 변화를 촉구하였음</li> </ul> <p><b>8.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 자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단체 및 각 단체의 단위노조에 자문을 상시적으로 진행하여 법률적 대응 역량을 강화함</li> </ul>
<p><b>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지원 및 소송 대리</li> </ul>	<p><b>1. 신규구성원 영입 및 신규 연대단위 확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 법률전문자문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추가, 공익사건 발굴 및 법률조력 가능성 확대</li> </ul> <p><b>2. 이주여성 인권 관련 제도 개선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관: 이주/젠더/돌봄 주제 한미 지역 전문가 세미나 진행 (총 4회 중 1회): 국내외 인구상황변동에 따라 돌봄시장에서의 이주배경여성노동력활용에 따른 노동환경 실태조사 필요성 확인,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성 공감.</li> <li>- 성인중차별적 국제결혼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별진정</li> </ul>

후 1년만에 전면 폐지 성과, 인권위 환영 입장: 지자체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필요성 대두, 지역단위 별 국감 등 현장상황 모니터링 계기

### 3. 성착취/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A, B 지원

- 고소 대리 건(가해자 X), 창원지방법원 1심 유죄 징역 2년 실형, 항소심 지원, 합의 대리
- 고소 대리 건(가해자 Y), 수사 종결: 기소 의견으로 관할 이송,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처분 대기
- 이주배경 피해자 2인 체류자격 연장 지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옹호기관 통한 피해자지위확인제도 활용 및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운용에 있어 현장 상황 반영한 자문 기회 : 이주배경 피해자의 특수성 고려한 지원 모색

### 4. 성산업 현장 조사 및 피해 지원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상시 자문, 정기 이태원아웃리치, 이태원 기록사업, 전문가 사례회의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소수자 성매매 관련 당사자 상담 및 통합사례지원 회의 개최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성매매 광고 피의자 C 변론, 1심 무죄, 검사 항소 2심 지원(진행 중) : 성매매처벌법의 성판매여성 단속 및 표적 수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피해자지원기관 연대체와 관련 사례 취합하여 단속 중단 및 법률 개정(성판매자 불처벌) 촉구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의원실에서 개정안 발의 검토 성과

###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인천 소재 고등학교 발생 딥페이크 피해 건: 기관 명의 고소대리, 수사 중 특정된 피해자 대리 : 피해자 보호하는 선에서 가해자 특정 수사 독려, 특정된 가해자 3인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각 처분내려짐,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대리자로 출석 및 의견 진술. 미성년피해자 지원 가능성 열고 적극적 수사 촉구하여 처벌까지 이뤄진 성과

### 6. 교육/강의

- 연세대학교성평등센터 주관: 공익변호사, 젠더인권 전문

	<p>가로서의 활동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국방부 전담교관 대상 성인지교육: 젠더기반폭력 관련 의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 대중적 인식 확산 성과</li> </ul>
<p><b>재난인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및 책임자 공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li> <li>- 대책위원회 등 현장 지원</li> <li>- 국정조사 등 국회, 정부 관련 사법 절차 대응</li> <li>- 국회 토론, 간담회 등 제도 개선 활동 및 특별법 제정 운동</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 지원</li> <li>- 특별조사위원회 모니터링</li> <li>- 피해구제심위원회 및 추모사업위원회 구성 및 모니터링</li> <li>- 1000 일 추모문화제 기획</li> <li>- 3 주기 시민추모대회 및 기억식 준비</li> <li>- 오송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등 재난참사 유가족 연대활동</li> <li>- 특별법 개정활동</li> </ul> </li> <li><b>2. 민변 10.29 이태원참사 TF</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자들 형사공판 모니터링 및 의견서 제출, 유가족 진술 준비 등</li> <li>- 김미나 창원시의원 등 이태원참사 소송 사건 지원</li> <li>- 국가배상소송 준비</li> <li>- 국가수사본부 2가해범죄수사팀 협업</li> <li>- 합동검경수사단 수사 협조</li> </ul> </li> <li><b>3.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법 제정 및 후속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변호사협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코로나인권 TF 활동의 일환으로 3 년간의 활동의 결실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는 데 주된 역할을 수행했고 하위법령 작업, 관련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족들 대변해 상당 부분 의견을 반영시켜 다수의 피해가족들이 완화된 기준에 의해 피해구제 심사를 받게 됨.</li> </ul> </li> <li><b>4. 경북, 경남, 울산 산불 피해 지원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 피해 대응 초기 재난침사 피해자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정례 회의를 통해 과제를 도출함.</li> <li>- 현장답사, 국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관행적 지원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킴.</li> </ul> </li> </ol>

**5.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 진상규명의 조직과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활동, 부적절한 공청회 강행 저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6.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활동**

- 재난피해자의 권리, 생명안전위원회, 안전영향평가, 독립된 재난조사기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안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하고 행안부 등과 협의를 진행함.

**7. 국제인권적 네트워크 마련 등**

- [UN DRR 유엔 재난경감 다자간 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인권적 관점 학습](#)

**8. 교육 및 연구**

- 재난피해자 권리 관련 국제기준의 배경, 내용 및 실행 연구 보고서(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인권센터 들 집담회 참여
- 재난참사 피해자 교육자료 자문 등 상시 연대 활동

- 재난인권팀의 활동은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사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를 재난 대응의 주변부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태원참사를 비롯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코로나 19 백신 피해, 산불 피해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수사·조사·피해구제·추모 과정 전반에서 반복되어 온 배제와 권리 침해 문제를 가시화하였다. 특히 형사공판 모니터링, 국가배상소송 준비, 2차 가해 대응, 특별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 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문을 통해 재난의 책임 문제가 국가와 사회

	<p>가 부담해야 할 법적·제도적 책임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 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동시에 재난인권팀은 개별 재난 대응에서 축적된 경험을 법제 개선과 사회적 기준의 변화로 연결해 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재난 관련 법률 개정 활동, 국제 인권 기준과의 접목, 재난 피해자 권리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 재난 대응의 기준을 시혜적 지원에서 권리 보장 중심의 구조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재난 피해자와 시민사회, 법률가 네트워크 간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재난 유형을 넘어 반복되는 불평등과 권리 공백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가 공백 없이 보호되고, 책임 규명과 회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임팩트를 갖는다.</li> </ul>
<p><b>국제인권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권기준 국내적 규범력 확보 및 국제인권 기구 활용</li> <li>- 이주난민인권 법률지원 및 소송대리</li> <li>-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현 위한 활동</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u>20-22 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년 이후 8 년 만의 대한민국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유엔 심의</li> <li>-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 코로나,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에서의 이주민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합동 보고서 제출 및 제네바 심의 현지 대응 통해 현재 한국사회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를 도출함</li> <li>- 이후 하반기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및 국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진행 등 후속작업 진행을 통해 정부 각 부처, 법원, 국회 각 위원회 별 의무를 세분화하여 적시하고 전달하여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유엔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실제 이행되고 한국사회 제도적 인종차별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됨.</li> </ul> </li> <li><b>2. <u>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2 심 승소</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4. 30. 화성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에 대한 '새우껍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2 심 승소</li> </ul> </li> </ol>

- 1 심에서 인정된 새우껍기 등 가혹행위 위법성에 더하여,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영상이나 정보 유포한 법무부의 행위 위법성까지 추가 인정
- 대법원 사건 계류 중.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자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개인정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인만큼, 향후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인권존중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국인 개인정보 배포에서의 인권존중의무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 3.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 약탈적 대출사업 보고서 발간](#)

- 작년 현지조사 후 추가 문헌연구,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사업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현지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심층 조사보고서 국영문 발간(6/30)
- 보도자료 발간 후 국내외 [언론](#)에 소개, 캄보디아 현지 은행 및 소액금융기관 협회에서 고객보호 강화 관련 [성명](#) 발표
- 7 월 문제가 된 두 은행 본사 담당자와 면담 진행, 현지조사 결과 전달 및 책임 있는 조치 요구
- 9 월 이 사안에 대한 휴먼라이츠나우 보고서 발간,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보도자료](#) 배포

### 4. [기업 인권환경실사의무화법안 재발의](#)

- 제 21 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기업 인권환경실사의무화법안 재발의(6/13)
-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제처 의견 등 반영하여 법안 수정 및 보완, 발의 당일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 8 월 법안에 대한 [국회토론회](#) 주관
- 8 월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실사법캠페인 TF” 결성
- 10 월 29-31 일 다국적 기업들의 본국과 진출국 활동가들이 모여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업책임강화 방안을 논의한 아시아 시민사회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주관
- 2025 년 인권환경실사의무화법안 재발의 및 법안 발의사실이 국내·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주목을 받아

한국에서 기업 공급망 책임성 강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성과가 있었음

#### 5. 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활동

-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가 없는 무기한 구금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202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법개정 위해 노력해왔고,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이어짐
- 그러나 정부 입법예고안은 구금 상한을 18개월로 하되, 일정한 경우 최장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구금 통제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이었음
- 이에 법사위 소속 의원실과 만나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회견 개최, 서명운동, 토론회 개최, 법무부와 간담회 진행 등 시민사회안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은 구금 상한 9개월, 일정한 경우 2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과됨
- 또한 입법과정에서 구금 통제를 담당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가 3개월마다 석방여부가 아닌 구금을 계속할 것인지 심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반영되었는바, 출입국당국이 구금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구조가 상한 설정과 더불어 여러 한계와 문제는 남아 있지만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6. 이주가사노동자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4. 8.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돌봄노동자가 입국함. 이에 대해 공감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하고 돌봄공백을 저임금 이주노동자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력함.
- 2025년 상반기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을 인터뷰 등 실태조사 진행하고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함

- 아울러 돌봄노동자의 사업장변경과 노동사건을 지원하여 권리구제를 받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연대회의 활동으로 이주돌봄노동자들의 실태와 시범사업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드러낸 결과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함

## 7. 유엔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의 9개 핵심인권조약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만을 제외한 8개 협약을 비준하였음. 현재 한국사회에 등록 이주노동자가 200 만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관련 법령은 이주노동자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를 통해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현실적 경로를 모색하였음.
- **강제실종협약:** 강제실종의 정의, 비국가행위자의 강제실종,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정의 및 피해자의 권리, 보편적 관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강제실종협약 국내이행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와 협의를 진행함. 강제실종위원회의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질의목록 작성을 위한 NGO 보고서를 작성해(특히 국제기준 국내이행, 국가인권위 이주구금, 탈북자 합동신문, 해외입양 인권침해 부분 집필) 위원회에 제출함.
- **사회권규약:** 내년 예정된 사회권위원회 제 5차 대한민국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 사무국 구성단체로서 6 월에 쟁점목록 채택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9 월에 사회권위원회 NGO 브리핑에 참여하였음.

## 8.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대응 활동

- 덴마크 입양인의 친가족찾기소송의 자문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결정 이후 그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기초발제를 하고 미국, 스

	<p>웨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의 해외입양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함.</p>
<p><b>성소수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지원 및 소송 대리</li> <li>- 입법 운동 등 제도 개선</li> <li>- 연대 활동, 운동 확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u>혼인평등소송 헌법소원 청구</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11 쌍 동성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li> <li>- 일부 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하여 현재 심리 중임.</li> <li>- 이번 헌법소원은 국내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첫 헌법소원임.</li> </ul> </li> <li>2. <b><u>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활동</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지개행동은 국내 49 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연합체로, 2025 상반기에 상근 사무국 체계로 조직개편을 함.</li> <li>- <u>대선 시기, 성소수자 인권 정책 공약 토론회 개최함.</u></li> </ul> </li> <li>3. <b><u>청소년 성소수자 지원단체 땡동 법정책 자문단</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땡동식당, '성소수자가 이긴 사건들' 발표.</u></li> </ul> </li> <li>4. <b><u>트랜스젠더 등록부정정(성별정정) 사건 지원</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 등 의료적 조치 강제요건 관련 사건 지원</li> </ul> </li> <li>5. <b><u>성차별적 성소수자 혐오적 성교육에 대한 민원인 피소건 변론</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 무혐의 불기소, 검찰항고 기각</li> <li>- 민사 상대방측의 소취하로 승소 종결</li> </ul> </li> <li>6. <b><u>HIV/AIDS 예방법 개정 운동</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에이즈 예방법을, 현대 의학의 발달 환경과 인권의 관점에서 개편하는 전부 개정안을 관련 단체들과 성안함</li> <li>- 2026년 상반기에 국회 발의 목표로 사회에 만연한 감염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변화를 기대함.</li> </ul> </li> <li>7. <b><u>동성 부부의 상대방 자녀 입양 사건 지원</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성 부부의 상대방 자녀에 대한 친권 등 부모로서의 권리 인정을 통해 동성혼에 대한 간접적 인정을 받는 효과를 기대함.</li> </ul> </li> </ol>

	<p><b>8.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대한 HIV 강제검진 및 해고 사건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대한 HIV 강제검진 정책이 인종 차별로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검사를 한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고용주에게 통보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지원함</li> <li>-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병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을 하고, HIV 강제검진 정책 폐지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함.</li> </ul> <p><b>9. 성소수자 난민 신청 사건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자 등에 대한 사건 지원</li> <li>-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음</li> </ul>
<p><b>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b></p>	<p><b>1.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하여 2025. 5명의 공익변호사들이 브라이언 임팩트의 지원을 받아 활동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김도희 변호사(동물해방물결 - 동물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천어축제 반대 캠페인</li> <li>- 기후생태헌법 국회토론회</li> <li>- 살리는 대화 살림터뷰 런칭(동물권, 동물정치, 비거니즘 해외 연구자 인터뷰/프랑스 인류학자 프레데릭 켄 인터뷰 진행 및 발행)</li> <li>- 동향과 물결 통권 제 4 호 발간(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동향과 시사점)</li> <li>- 소싸움 폐지 캠페인(이제는 멈춰야 할 소싸움 보고서 발간/소싸움 경기장 재현한 캠페인 액션 및 영상 릴리즈)</li> <li>- 복날추모제 &lt;그 몸, 나의 몸&gt; 본 행사</li> <li>- &lt;생태헌법 만들기&gt; 강연(동물보호와 자연보전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흐름)</li> <li>-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대통령실 면담</li> </ul> </li> </ul>

-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중 후속행동
- 구조동물 생추어리 <달뜨는 보금자리> 개관식
- 반려동물 유기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책토론회
- 폭력과 착취너머, 공존과 연대를 실천하는 바다 생명 축제로 집담회

○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 - 난민인권)**

- 이집트 정치적이견 사유 난민신청자 난민불인 결정 취소소송 대리, 1심 승소 후 난민인정
- 중국 정치적이견 및 소수민족 사유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공동대리 1심 승소
- 구금된 성소수자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절차 대리
- 수단 정치적이견·종교 사유 난민신청자 난민불 인정결정 이의신청대리
- 인도적체류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공동대리
- [단속피해 난민신청자 산재 등 조력](#)
- [외국인보호소 폭력피해 난민 조력](#)
- '[성명]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 발표

○ **위서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지역 (광주)기반 공익변호사 단체)**

- 인신매매 피해 예술흥행비자(E-6) 사증 초청자 및 해남 계절근로자(E-8) 지원 등
- 전북 김제 F-2-R 비자 이주배경아동 청년노동자 강태완 군 산업재해 사망 사건 대응 대책위 참여 및 법률 조력
- 네팔 국적 E-9 노동자(망 TULSI PUN MAGAR) 직장내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자살 산재 사건 조력
-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한 난민신청자 등 법률 지원
-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 법률지원단 진상규명 팀 활동

- 광주귀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활동
-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사망 사건 대응
- 지역 보육시설 아동 사망 사건 대응

○ **김수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지역 (목포)기반 공익변호사 단체)**

- 베트남 이주노동자(당 테 양) 부당처우 및 부당 해고 사건 대응
- SHIRO(일본기업)-동행 신안 염전 생산현장 인권실사 용역
- 영암 우성축산 네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지원
- 신안국 농어업 이주노동자 근로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문
- 캄보디아 CNRP 활동가 미에스 피살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사건 스리랑카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
- (주)대한조선 부당해고 방글라데시 노동자 2 명 무료 법률지원
- 일본제철 상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손해 소송 법률지원
- 태국 국적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 민사 손해 소송 무료법률지원
- '2025 광주광역시 글로벌도시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연구용역

○ **박소영 변호사(녹색법률센터)**

- 부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대리
-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대리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 소송 대리
-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대리
- 신흥 풍력발전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측 대리

네트워크단체지원  
(혼인평등연대)

**1. 혼인평등 헌법소원**

- 합리적인 사유 없이 법률혼에서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 해석에 대해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 현재 헌법재판소에 총 9개의 사건 정식 회부

**2.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 행사 진행**

-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 - 변화하는 가족, 성숙하는 민주주의: 동성혼 법제화” 개최

**3. 2025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배우자 및 비혼동거 커플 집계 시작**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인구조사에 성소수자 인구 첫 집계

**4. 지역별 퀴어문화축제 참여**

-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된 국내 주요 퀴어문화 축제에 부스, 행진으로 참여

**5.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기반의 캠페인**

- 한국사회가 혼인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 SNS 명절 캠페인 진행: #혼인평등추석 #모두의한가위 #모두의가족사진 등 명절 캠페인 진행

#### 4. 활동 사진

- 취약노동 인권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반도체 노동자 자녀 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 여성 인권



결혼 이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



'성매매여성 처벌의 현실: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여성들': 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 재난 인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김미나 창원시 의원 유가족 모욕행위 민사손해배상청구 승소

- 국제 인권



UN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참가단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인권



HIV 장애등록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기자회견



2025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 개최